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공천 방식은 후보의 자질·정책 캠페인과 더불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보의 자질과 정책이 확연히 드러나고,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변화를 느낀 민심도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배심 원제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외부인이 포함된 200명의 시민배심원단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의 자질·정책을 평가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되면 호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에서 도승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솔깃하게 한다. 조직·인력 동원 등 체육관 결선의 부작용을 피하고, 보다 나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령도 그렇듯하게 들린다.

광주가 승리 견인?

과연 그런가. 아니다. 최소한 민주당 광주시당 구성원의 대다수는 지도부의 이런

주장을 곧이 듣지 않는 듯하다. 왜 광주시장 공천에만 시민배심원제도 도입해야 하느냐가 첫 번째 의문이다. 여기에는 외부 인사들이 광주시장 공천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민주당 공천, 民心은 없다

는 질문이 앞선다. 설사 배심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더라도 광주시민의 믿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포함돼 있다. 소위 당심(堂心)과 민심(民心)의 일치 문제다.

광주시장 공천이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자체의 실립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누구나가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가정은 억지라는 이야기다.

오후려 '광주시장 후보는 우리가 결정 한다'는 당 주류의 기득권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논란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도입하려고 하는 공천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시민배심원제 도입과 국민참여경선 두 가지로 대별된다. 단체장의 경우 선거 승리가 필요한 전략지역은 시민배심원제로 공천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시민과 당원들이 50대 50으로 참여해 후보를 뽑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상황에 따라 경선 률을 달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국민참

문제가 돼 시끄러우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득권 포기가 핵심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필자는 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천권을 과감하게 지역민들에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공천의 역사는 기득권 포기와 궤를 같이한다. 군부독재시대에는 궁정동과 삼청동 안가에서 1인 절대자가 출미자를 낙점했다. 1987년 이후 3김 시대에는 DJ와 YS의 상도동·동교동 사저가 공천의 장(場)이었다. 2005년 광주가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로 각광을 받았던 것도 국민참여경선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공천이 유권자와 당원에게 주어진 덕분이었다.

공천 기득권을 버린 쪽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8년 총선 이후 이 같은 상향식 공천방식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민주·양당 모두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에 권한을 위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를 외면한 결과가 과연 공천 혁신으로 이어질 지 의문이다.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시설

채권단, 금호산업 성급한 법정관리 안된다

금호산업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처했다. 채권단이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오는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에 대해 법정관리에 들어올리겠다는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정상화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앞날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총 17개 FI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계투자펀드인 오크트리와 국내 투자자인 미래에셋캐피탈 등 2곳이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통운과 대우건설의

지분 맞교환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베티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채권단은 지분 맞교환 등의 방식은 채권은행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들의 요구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생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앞날마저도 장

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

단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채권단과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법

정관리로 가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양측 모두 엄

청난 손실을 입을 게뻔하다. 특히 투자

자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려 범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호남기업의 최

후의 보루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 전면시행, 제도보완 뒤따라야

교원평가제가 어제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됐다. 교원평가는 교사 평가에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하는 교사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겐 의무 연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

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

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

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

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

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식으

로 흐름을 놓고, 평가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

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집착된 수업 내용을 단순